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2차시 : 1930's~1945 일본의 식민통치	학번	
	임종일 T		이름	

★병참기지화 정책

1930's 일본의 통치방식 : 민족말살통치

경제정책 : 병참기지화 정책

*1차 대전 이후 (①)을 겪으면서 일본은
농업 뿐만 아니라 공업, 광업 분야로 수탈대상 확대

*1930년대 초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방직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중단, (②)을 실시

&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③)로 만들려는 정책

1930년대 (④)공업과 (⑤)부분에 집중적으로 침투
→ 식민지공업화가 빠르게 진전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이 설립.

★전시 동원체제 구축

-1938, (⑥)을 제정

-한국인을 통제, 침략전쟁에 동원하고자 국민정신 총동원운동 펼침

-국민 징용령 제정

(⑥) (1938)

1.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정도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4.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7.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8.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관보" 3391호(1938) -

cf.

1910's 통치방식 : 무단통치

경제정책 : 토지조사사업

1920's 통치방식 : 문화통치

민족분열통치

경제정책 : 산미증식계획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1931 : 만주사변

-1933 : 국제연맹 탈퇴

-1937 : 중일전쟁

-1941 : 태평양전쟁

*대공황 Great Depression (1929)

*전시동원체제 - 법

1938 국가총동원법

1938 지원병제

1939 국민징용령

1943 학도지원병제

1944 징병제, 여자정신근로령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2차시 : 1930's~1945 일본의 식민통치	학번	
	임종일 T		이름	

★민족말살정책

-침략전쟁 확대로 인해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함.

‘일본과 조선이 하나’ (⑦))라고 하거나,
 ‘일본인과 한국인의 조상은 같다’ (⑧))라고 주장하며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화시키려는 민족말살정책 시행

- ▶어린학생을 세뇌하러 (⑨))라는
 충성 맹세문을 억지로 외우게 함
- ▶일본 궁성을 향해 허리숙여 절하도록 함 (⑩))
- ▶신사참배 강요
- ▶소학교의 명칭을 (⑪))로 바꿈
-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
 (창씨개명 거부시 식량, 물자배급 제외, 자녀 학교입학 금지)
- ▶우리말 금지
 - 조선어 과목 폐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글신문 폐간
 - 1942,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선어학회 회원을 해산시킴

(⑨))

- 1 .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 천황 ’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글쓰기활동

일제는 내선일체의 방법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써보세요

1910년대 중반 이후 일제는 조선과 일본은 유사하므로 동화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저항에 봉착하자, 민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저항을 무마시킬 방책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조선인이 마음으로 부터 식민지배에 순종하도록 하는 방책, 즉, 조선인을 동화시키기 위한 전제가 융화이고, 1920년대 내선결혼은 내선융화의 상징으로 대두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내선결혼’ 법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내선결혼을 양 민족이 서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융화의 결과로 표상하고, 사랑을 연쇄시킬 융화책으로서 통혼을 장려한다는 선전을 본격화했다. 이때 내선결혼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조선인이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접하게 함으로써 조선인의 사상·문화를 일본인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출산을 통해 혈육적으로도 일본인화 할 수 있는 동화의 궁극적인 수단으로도 이상화되었다.

조선총독부도 1920년대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내선결혼 부부 수를 조사하여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통혼은 매년 증가하고 그 가정은 모두 원만하다고 강조하면서 내선융화의 전도도 밝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이상으로 하는 결혼관이 유행하는 가운데, 내선결혼이 당사자 간의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정략적 혹은 경제적 동기로 인한 내선결혼도 많았다.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상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내선결혼에서도 부모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혼을 결정하기도 했다.

(일본인의 생각 / 조선인의 생각 / 결혼하는 일본인의 생각 / 결혼하는 조선인의 생각)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3차시 : 1930's 독립운동	학번	
	임종일 T		이름	

★1930's 초반 독립운동 in 만주 [★한중연합작전]

배경) 1931, 만주사변 이후, 1932, 일본, 만주국 수립

→ 중국 내 반일감정 고조

3부통합 운동

→ 북만주 : 한국독립당(군) - 지청천 :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with 중국 (①)

→ 남만주 : 조선혁명당(군) - 양세봉 : 흥경성, 영릉가 전투
with 중국 (②)

1931, 일본의 만주사변 이후,

독립군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짐

→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활동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in 만주, 1930's

; 중국 공산당 내에서 민족과 노선에 관계없이 반일통일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 '동북항일연군' 조직 - 보천보전투

; 한인 유격대는 함경도 일대에서 조국광복회를 조직
이후, 소련으로 이동해서 활동

★민족혁명당 /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로 이동한 독립군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

-1935, 난징, (③) 창당

: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대부분을 합친

중국 관내 최대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정당

but, 김구 등은 임시정부 약화를 우려하여 참여하지 않음.

&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잡자

지청천, 조소앙 등 민족주의 세력 일부 이탈

민족혁명당은, (④)이 발발하자 다른단체를 통합하여

(⑤)을 결성

(⑤)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⑥)를 창설

-정보수집, 포로심문, 후방교란 등의 활동

but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투쟁에 소극적인 모습

-> 화북으로 이동 ->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

-호가장전투에서 큰 성과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4차시 : 독립을 위한 노력	학번	
	임종일 T		이름	

★건국을 위한 준비 - 대한민국임시정부

#모든 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 ()의사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상하이를 떠나 창사, 광저우 등 중국 각지를 거치게 됨.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일본의 술래잡기 from 상하이 to 충칭]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김구, 한국국민당,

조소앙,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에서 이탈) ,

지청천, 조선혁명당 등

민족주의 계열 3개 정당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결성

이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 속한 정당이 합당하여

[한국독립당] 결성

(위원장 :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집권당 역할)

#1940년,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

-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 마련

- 1942, 민족혁명당 출신 김원봉 등 합류

★1941, 태평양전쟁 직전, 대한민국건국강령 발표

()의 ()에 기초하여

민주공화정 수립, 토지개혁, 대기업국유화, 무상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 대한민국정부수립, 제헌헌법제정에 큰 영향

#한국광복군

대한민국임시정부 - 1940, 한국광복군 창설

-사령관 : 지청천

-이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

활동

-1941,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 대일선전성명서 발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음

but, []으로

중국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대일항전 직접전투에 참여


-일본군 포로심문, 회유방송 등 심리전에 큰 성과

-인도, 미얀마 등 전선에 공작대 파견 - 영국군과 공동작전

-국내진공작전(독수리작전)계획 but 일본의 빠른 항복으로 실패

[임시정부 이동]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4차시 : 독립을 위한 노력	학번	
	임종일 T		이름	

★건국을 위한 준비 -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1942, in 화북 / 한국인 사회주의자 중심 - 조선독립동맹 결성

- '연안'으로 이동해 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벌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수립, 남녀평등, 토지분배, 의무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건국강령 발표

★건국을 위한 준비 - in 국내

- 여운형 중심 - [조선건국동맹] 결성

- 공출반대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합작전계획, 강령발표

★건국을 위한 준비 - in 미주

-in 하와이 - 대한인국민회 등 미주지역 9대 한국인단체가 연합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결성

-모금활동 -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

- 태평양전쟁이후 한국인 신분증 발급

-in LA, 한민국방경위대(맹호군) 조직

-in 워싱턴, 외교위원회 설치

-with 미국, 냅코작전 계획 but,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실행 X

★★★한국문제를 세계인들이 논의하다 - 카 알 포 ★★★

1943, 카이로회담

: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논의 (in due course)

(태평양 전쟁이후 어떻게 해야할까?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논의됨)

1945, 독일패망 임박 - 알타회담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

-패전국과 해방국에서

민주세력에 의한 임시정부구성, 자유선거 실시라는 원칙 마련

1945, 7월, 포츠담회담 -(독일항복 이후)

-전후 독일 처리 문제

-일본과의 전쟁 방안 논의

-일본에 무조건 항복 촉구

-카이로 회담 모든 조항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3대 강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

- '카이로 선언' (1943) -

1. 국민들의 모든 민주적 요소는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최단 기일 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약속하는 정권의 수립


2.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유선거 실시의 편의를 도모할 것

- '알타 협정' (1945) -

6. 우리는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구축될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세계 정복의 허영을 종용하는 과오를 범하게 한 권력 및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어야 한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할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됨.

- '포츠담 선언' (1945) -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5차시 : 8.15광복과 정부 수립 노력	학번	
	임종일 T		이름	

★ 광복

-1945. 8. 15. 일본 왕이 항복선언

-한국인의 독립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

but,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수립은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945. 8월,

-미국,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북위 ()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양국이 군대를 진주시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제안

→ ()이북지역은 ()이,
이남지역은 ()이 관할

#미군,

조선총독의 항복을 받고 ()을 설치

& 남한을 ()통치

: 현상을 유지하여 새로 수립될 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중점.

so, 일제의 식민통치 기구와 관료, 경찰을 그대로 유지

미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부로 인정X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등 자치기구 인정X

#소련군,

-각 지역에서 결성된 ()에 ()을 이양

()통치하는 방식을 결정

-소련군과 함께 귀국한 공산주의자를 지원 -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함.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은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직

-광복직후 사회안정, 식량과 필수품 확보주력

-미군이 진주하였을 때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위해

조선인민공화국 성립 선포,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

-좌익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자, 우익세력은 건준을 탈퇴

광복이후 주요인사들도 활동시작.

-김성수 - 한국민주당 창당

-이승만 -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 조직

-김구 등 임시정부 - '개인'자격 귀국, 한국독립당 중심으로 활동

#왜 38선일까?



#38선 ≠ 휴전선


@ 김일성별장

#강령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6차시 : 광복~대한민국정부수립	학번	
	임종일 T		이름	

★광복 ~ 대한민국정부수립 대내외적 정국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 12.)

-미/영/소 3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의 독립문제 협의
이 회의에서 미국은 ()을, 소련은 ()을 제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은,
1. 민주주의 () 수립
2. () 설치
3. 최대 5년간의 ()가 결의

1. 한국을 독립국으로 부흥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
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조건들을 창조할 목적으로 ‘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창설한다. 임시 정부는 조선의 산업·운수·농촌 경제
및 한국 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한국 임시 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한 방책들을 예비 작성하기 위하여 **남한 미
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한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
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3. 한국 인민의 정치·경제·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한국
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하는 방책들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임시 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
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문’ -

but, 회의의 결정안이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동아일보**의 잘못된 보도
&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채

신탁통치 실시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

-한국인들은 신탁통치를 다시 식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거세게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임.

⇒ 이에 대한 반응

김구, 이승만 등 우익세력 : 신탁통치는 한국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
신탁통치 반대운동

중도, 좌익 : 초기에는 반탁, 이후에는 찬탁

임시정부 수립 등 회의의 모든 사항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여운형 등 중도세력 - 미소공동위원회에는 협조,

신탁통치는 후에 논의할 것 주장

#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6. 3. ~ 1946. 5.)

남한은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싸고 우익과 좌익의 대립

미국과 소련은 1946.3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
미국과 소련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 및 사회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

소련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

(좌익세력만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도)

미국 ;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정당과 사회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겠다는 의도)


이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기한 휴회

※ 동아일보 보도내용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삼팔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6차시 : 광복~대한민국정부수립	학번	
	임종일 T		이름	

#이승만의 정읍발언 (1946. 6. 4.)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하자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좌우합작운동 (1946. 7.)

-미소공위 결렬 & 정읍발언으로 [단독 정부가 수립될 위기]

-주도 :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파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침

※ 미군도 좌우합작 위원회를 지원

-좌우합작위원회는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등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절충]

⇒ 좌우합작 7원칙 발표

미군정은 이를 토대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구성

BUT,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 우익세력

& 박헌영 등 좌익세력은 불참, 좌우합작 7원칙에도 입장차이

한국민주당 ; 토지개혁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다!

반탁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일부 ; 차라리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좌익 ; 친일파 처단의지가 명확하지 않다!

토지개혁의 '유상매입'방법이 지주의 이익을 위한 것!

So, 좌우합작운동 지지부진, 냉전 본격화, 미군정의 지원도 철회

& 여운형의 암살 → 좌우합작운동 중단

#2차 미소공동위원회 (1947. 5.)

[참여 단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

→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UN총회**로 넘김 (1947. 9.)

→ 소련은 이를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참

UN총회

: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

→ 총선거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

but, 소련은 38선 이북지역으로 UN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

→ UN소총회

: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선거 실시 결의

#남북협상 시도 / 김구, 김규식 (1948. 2.)

-김구, 김규식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 등 북한지도부에 남북 정치요인 회담을 제의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만남 - 남북 협상

협상결과

: 통일국가수립을 위해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 발표

but, 미국, 소련 모두 이 합의안 무시

북한 역시도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음


유엔도 단독 선거를 철회하지 않음 - 분단은 피할 수 없었음.

★ 해방이후 주요인물 정치성향

좌	중도	우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일성		안재홍
김두봉		이승만
		김성수

★좌우 합작 7원칙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 · 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 개혁에 있어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입법 기구가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가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 행동을 일절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7차시 : 제주4.3 ~ 대한민국정부수립	학번	
	임종일 T		이름	

★제주 4.3 항쟁

- 1947. 3. 1. 3.1절 행사에서 사건발생
- 미군정도 제주도 주민을 탄압
- 1948. 4.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단독선거저지, 통일정부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킴.
- 미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제압
- 5.10총선거로 수립한 이후, 이승만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군대 일부를 제주도로 출동시키려 함.
- 이에 부대 내 좌익세력이 **[제주도 출동반대], [통일정부수립]**등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여수, 순천지역을 점령 (여수, 순천 10.19 사건)
- 정부는 반군을 진압. 군 내부 좌익 세력을 제거
- 수습과정에서 일부 반군은 지리산 등으로 이동하여 6.25까지 활동.

★5.10 총선거

- 1948. 5. 10.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아래 국회의원 뽑기 위한 민주적인 총선거가 실시
- 단원제로 구성
- 인구비례로 38도선 이남지역 200석, 이북지역 100석 배정
- 38선 이북지역은 선거가 가능해질 때 선출하기로 함
- 21세 모든 국민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 참여 투표율 (95.5%)
- but,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와 일부 좌익세력은 선거참가X
- 제주 4.3으로 국회의원 선출이 불가했던 **제주도는 이듬해에 선거 실시**
- 제헌국회** 구성 (헌법을 제정하기위한 국회) - [헌법기초위원회] 조직
- 국호 : 대한민국
- 국민 주권에 기반한 제헌헌법 제정, 선포 (1948. 7. 17.)
- 삼권분립, 대통령중심제 채택
-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간접선거**)

*part

part : 부분

v. 헤어지다

partial

impartial

party

participate

particle

partisan

총선 :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연임가능)

<법을 제정>

대선 : 대통령선거

(현재는 5년마다, 중임불가)

<법을 실행>

-선거결과-

무소속 - 85석 (40.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55석 (26.1%)

한국민주당 - 29석 (13.5%)

대동청년단 - 12석 (9.6%)

조선민족청년단 - 6석 (2.2%)

기타 - 13석 (8.3%)

제헌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분배의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한다.

제101조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7차시 : 제주4.3 ~ 대한민국정부수립	학번	
	임종일 T		이름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헌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 **이승만**, 부통령 - **이시영** 선출

-대통령이 대법원장(김병로)과 국무총리(이범석)를 임명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취임사)

-옛 총독부 건물을 정부청사로 사용 (중앙청으로 부름), 태극기 게양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으로 모든 행정권 이양받음.

-1948. 유엔총회, 대한민국정부가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
한 합법정부라는 결의안 승인

광복절?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물가폭등

-미군정의 미숙한 정책, 일제의 정책에 따른 산업편중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사회혼란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많은세력

-이승만, 반공체제 강화

***보도연맹사건**

-보안법 제정

-국민보도연맹 조직

★북한정권의 수립

-광복직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 조직 [*소련은 간접통치]

-김일성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정권수립작업 진행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토지개혁] 을 실시하여

5정보 초과하는 토지를무상몰수, 무상분배 (1946)

+주요산업, 자원을 국유화 -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만들

-이를 반대하는 사람 중 다수는 38도선 이남으로 이동 (*현대, 정주영)


북한은,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단독정부수립 비판, 남북협상 참
여 but, 이는 show일뿐이었음.


-1947,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임시 위원회로 개편

-1948 초, 군대 창설 등 단독정권 수립준비 마친상태

-1948. 9. 9. 김일성중심 내각구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 선포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복습용 - 정리용 - 해방정국~정부수립	학번	
	임종일 T		이름	

연 대	사 건	내용 및 결과
광복전	()회담 ()회담 ()회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 () -()의 대일전 참전 -()재확인
1945.	8.15 광복	• 조선건국동맹은 () ()로 개편
1945	남북 분단	•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 ()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이 ()통치, 북쪽은 소련이 ()통치
1945. 1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 () 2. () 3. 미, 영, 중, 소의 5년간 한국의 _____ 결정 - _____ 은 반탁 운동 - _____ 은 반탁 운동하다가 찬탁운동으로 변경
1946.3~5	1차 _____ 개최	• _____ 갈등 - 미국 주장 : 모든 정치 단체 참여 - 소련 주장 :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들만 참여
1946. 6	이승만의 정읍 발언	• 남한만의 () 수립을 주장함
1946.7~ 1947.10	_____ 운동	• ()과 ()은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함. • () 원칙
1947. 5	2차 _____ 개최	• 결렬
1947. 11	한국 문제를 ()에 상정	• “()에 의한 ()” • 유엔 ()설치
1948. 2.	()	• ()가 가능한 지역에서 만이라도 실시
1948.4.3~ 1949.5	제주 4.3 사건	•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군대, 경찰, 반공 단체의 무력 충돌 → 많은 주민이 희생
1948. 4	남북 협상 개최	•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에 제안 (4김의 만남)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 → 실패
1948. 5	남한에서 총선거 실시(5.10)	• 우리 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
1948.8.15	_____ 정부의 수립 선포	• 우리 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국
1948.10.19	여수, 순천 10.19 사건	제주 4.3 사건 진압 거부하고 반란 → 실패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8차시 :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학번	
	임종일 T		이름	

★해방이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

1. 친일파 청산
2. 농지개혁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 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
- 제헌헌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
 - 국회직속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 재판부 구성
 - 7천여명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선정, 주요인물에 대한 조사와 체포

-범 국민적인 호응. 1949년 1월부터 활동 개시

but, 이승만 "좌익반란분자 색출이 풍부한 경찰관을 잡아들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건국 초창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요.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되는 것보다... 국가의 기강을 밝히기에 표준을 두어야 할 것이니... 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대한 편이 가혹한 형벌보다 동족을 애호하는 도리가 될 것이다.

+ 국회프락치사건 - 반민특위소속 국회의원을 구속

결국...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개정되어

- 친일파 처벌기한이 1950. 6. → 1949. 8.로 축소
- 반민족행위의 범위 축소
 - ⇒유명무실화

기소된 사람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사람은 이광수 등 축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 건도 없었음
대부분 감형이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감

*반민특위 실적

취급 건수	688건
재판 종결	41건
●사형	1건
●무기	1건
●유기 징역	13건
●공민권 정지	18건
●무죄	6건
●형 면제	2건

1948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

1.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4.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로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일제에 작위를 받은 자
- (4)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